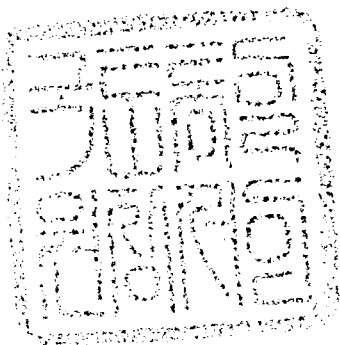


東歐接觸을爲한外交的代案

1973. 5



研究委員 李 泰 永

이 보고서는 국토통일원 73년도 상반기
학술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73년 5월 일

연구기관 동국대학교 中東歐문제연구소

연구책임자 李 泰 永

<東歐接近을 爲한 外交的 代案>

目 次

1. 序 論	1
2. 接近可能地域의 外政的 狀況	6
가. 알바니아	6
나. 유고슬라비아	12
다. 루마니아	20
3. 接近에 對의 Taktik 一考	26
가. 유엔을 本拠地로 하는 接近試圖	28
나. 西獨의 東方政策에 便乘하는 方法	31
다. 빈을 通한 經濟, 文化, 體育交流의 接觸試圖	35
4. 結 論	38

1. 序 論

二次大戰以後 四半世紀가 지났다. 終戰後 近 한 世代를 지나오면서 兩極體制下에 局部戰爭은 不端히 있었고 또 多元化 時代에 접어 들었다는 오늘의 東西解氷무드속에서도 部分戰爭은 의연히 存続되고 있다. 그러나 大戰後 核膠着이라는 時代的 特殊性때문에 人心의 變化는 크게 일었다. 世界史의 흐름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분명히 分열에서 통일에로 흐르는 世界文明의 한 <에포크>에 살고 있는 것이다. 20世紀의 思想家들인 K. 야스퍼·스(K. Jaspers)나 A. 토인비(A. Toynbee)가 <科學의 世紀>의 未來를 <통일되는 世界國家時代>로 前提하고 <一體化되는 世界>속의 인간이 어떻게 하면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人間性>을 되찾을 수 있는가를 그 나름으로 豫示한바 있다.

高度화된 科學과 技術이 오늘의 世界를 자꾸만 좁혀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다. 긴 눈에서 보면 분명히 現在나 現代가 高度로 産業화된 통일된 世界에로의 過渡期(Ubergang)인 것 만은 틀림없는 것이다. 發展的 歷史에서는 諸隣間이 모두 終末을 向한 過渡期였으니, 이 過渡期 自体가 各時代 즉 歷史的 諸時期의 특이한 성격을 갖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過渡期란 어떠한 特色을 갖는 것일까? 東西體制가 融合된 새로운 政治體制下的 産業化 社會가 來日이라던 Dualism의 世界秩序속에서 국민 國家의 理想을 堅持하자는 것이 現代人的 慾求요, 現代라는 過渡期의 特色이 아닌가 한다. 왜냐면 平和共存이라는 말 自体가 이질

적인 체제하의 和平을 뜻하기는 하지만 東西의 實際 政治를 보면 모든 나라의 國策이 一律적으로 그 民族과 國家利益을 바탕으로 樹立·구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19世紀의 유산인 <國民國家의 理想>을 世界 各國의 國民이 아직도 저바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을 단위로 한 세계질서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들 韓國人이 民族分斷을 초극하려고 兩쪽이 각각 死力을 다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南北韓의 再結合을 통해서 우리의 祖國을 期於히 世界 國民國家群의 隊列에 參與시키겠다는 꿈 때문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민족의 再結合은 어떻게 推進되어야 하며, 特히 同再結合을 위해서는 어떠한 外交만이 우리를 애워싼 四強係를 円滑 再調整하며 世界諸國의 지원을 얻을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가장 實利的인 우리 外交의 代案을 提示하기 위해 筆者는 좀 대담한 <어프로치>를 해 보려다. 筆者는 收斂理論 (Konvergenz-theorie)을 南北再結合 시도에 있어 非政治的인 問題의 諸交流를 위해서는 그 適用이 可하다고 보는 사람이다. 수렴이론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現代의 異質的인 두 社會·經濟體制 즉 資本主義體制와 社會主義體制가 相互 接近하므로써 마침내 同質的 單一體를 이룬다는 現代 및 未來 產業社會의 假說인 것이다. 즉 高度化된 產業社會에로의 수렴화과정을 肯定的으로 받아드린다면 諸民族分斷現象도 긴 眼目에서 보면 어느 形態론가의 統一 또는 再結合이 可能하다는 結論이 된다.

韓國과 같은 경우 南北이 서로 武力 不行使와 戰爭防止를 다짐한

時点에서 수렴이론의 肯定的인 假說을 前提하든 안하든間에 非政治的인 分野를 爲先 協商해서 協同으로 規制해 간다면 언젠가는 政治協商도 可能하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民族分斷의 再結合을 위한 政治協商을 加速化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한 나라의 外交政策이 內政과는 別個의 것으로 다루어 질수 없는 版局이 되었다. 달리 말하면 諸交流의 最後段階인 政治協商을 促進하기 위해서는 內政改革을 通해서 異質的인 兩体制의 平衡과 漸次的인 同質化가 先行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外政과 統一政策이 樹立되어야 할 時勢인 것이다.

從來의 統一政策이란 먹느냐 아니면 먹히느냐式的 극단적인 方法이였기 때문에 아무런 結實을 못거둔채 南北間에 軋線과 對立만을 자아냈든 셈이다. 즉 統一政策이 온전히 外政의 범주에서만 다루어 졌으므로써 어떠한 外政이 어느協定을 縮結해야만 國際關係의 對立을 解消하고 分斷을 초극할 수 있는가를 檢討했을 뿐이지 雙方이 各己 妥協的인 方法은 조금도 取하지 않았었다. 妥協的인 方法이란 다른것이 아니다. 7·4 共同聲明같은 協約이 誠突하게 遂行되어 가기 위해서 南北韓은 다같이 長期的으로 計劃된 社会政策을 通해서 內政上的 諸問題를 改革하여 漸次 統韓에 達아서는 進지한 外政 및 統一政策을 樹立했어야 하는 것이다.

7·4 共同聲明이 나왔다는 自体는 南北韓이 同等한 立場에서 民族의 念願인 統一問題를 論議하고 韓半島에서의 武力衝突을 極力 排除하겠다는 南北韓의 다짐인 것이다. 그런데 北쪽에서는 아직도 의연히 武装間諜을 南派하고 있고 또 우리쪽에서는 北韓의 諸國際

機構 加入試圖를 間接的으로 저지하고 있으니 第三國의 立場에서 보면 南北韓의 國策이 拙劣하기만 한 것이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四強의 力關係로 보나, 또는 北쪽이 굳혀 온 金日成 政權의 存立形態로 보나 <一民族 一國家論>을 繼續 固執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國家聯合案>을 제의하든지 不然이면 北쪽이 提議해 오는 同案을 어느 適期에 受諾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分斷을 초극하기 위해 現時點에서 國家聯合案을 提議 또는 受諾한다는 것은 우리의 民度(特히 民主主義에 대한 信憑度)와 社會·經濟生活의 水準으로 보아 混亂의 도가니에 빠지는 結果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다른 可能性이 있는가? 두가지 方法이 있지 않나 한다. 그 하나는 現狀態의 默示的 承認 形態에서 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의 諸接觸을 繼續 維持하되 南北調節委의 性格을 統韓促進을 協議하는 民間協議體로 規定지어두는 方法이다. 그리고 그 둘째는 지금 西獨의 境遇처럼 <一民族 二國家論>에 立脚해서 北韓을 特殊한 國法的인 形態로 承認하고 兩側 代表部의 交換을 비롯해서 諸交流를 施行해 가되, 國際政治에서도 善意의 競爭을 行하는 方法이다. 위와같은 세가지 方法中에서 우선 國家聯合案은 論外로 하고 默示的 承認下의 諸交流 打開方法과 國法的 承認下의 公開的인, 競爭的인 諸交流 施行策을 比較 分析해 보면 긴 眼目에서 볼때 國法的 承認下의 公開的인 諸交流方法이 가장 合理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면 이 民族分斷의 再結合 問題가 순수히 우리民族 自体에만 그 解決의 열쇠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를 에워싼 四強 및 世界政治에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結局 東西世界가 우리를 理解하고 또 北韓이 好意的으로 対応해 오는 国策을 樹立하지 않고는 外界와의 接觸에서 孤立을 免하기 어려운 것이 冷酷한 政治現實인 것이다. <一民族 二國家論>이 爲先은 民族分斷을 固定化하는 論拠이지만, 진정한 平和政策 追求의 道程에서는 相對方의 實存을 認定하는 것이 純理이며, 接近해서 理解와 協同을 通해 民族國家의 理想에 達하려는 긴 努力이 合理的인 統一政策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筆者는 우리 政府가 不遠한 將來에 北方政策의 指針 및 基本方向을 分明히 밝히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政策樹立에 多小나마 參考가 되도록 本論稿를 整理·敘述해 보려 한다.

(本論稿의 命題가 <東歐接近을 爲한 外交的 代案>인데 우리 政府로서는 理念과 體制를 超越하여 世界의 모든 國家와 修交하겠음을 다짐하고 公表했지만, 共產圈의 立場에서 보면 그들의 盟邦인 北韓을 우리 政府가 正式으로 承認하고 對東歐 交流를 請하지 않는限 蘇聯을 包含한 東歐諸國의 反應은 차거울 것이 뻔 하다. 그런故로 筆者는 우리 政府가 가까운 將來에 北韓을 國法的으로 承認하고 諸關係 正常化를 피해 줄것을 前提하는 方向으로 本論稿를 整理하는 바이다. 第二章에서 筆者는 東歐諸國中 우리 外交의 接觸 可能地域을 選定하여 그 나라들의 外政的 特色을 確定해 보고, 第三章에서는 如上地域에 어떻게 接近할 것인가의 戰略的인 面을 提議해 본다. 그리고 結論에서는 維新的인 內政改革과 플렉시블한 外政 및 統一政策이 果敢하게 並行試圖되어야만 世界秩序속에서의 韓國의 國民國家의 구현이 可能하다는 것을 産業化 社會의 收斂化理論에 依拠 說明해 보련다.

2. 接近可能地域의 外政的 狀況

가. 알바니아

東歐 共產圈에서 나라의 크기 그 自体도 가장 작은 나라일 뿐더러 国力도 제일 微弱하며 아주 後進的인 나라가 알바니아다. 그러나 韓国外交의 接近 可能地域으로써 알바니아를 다루는 理由는 저 나라가 對蘇紐帶에 얽혀있지 않고, 政治的으로 經濟的으로 中共을 宗主國視하고 있다는 特殊事情 때문이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四強關係의 再調整을 爲하고 또 그에 따라서는 對共產國外交까지도 遂行해 가야할 우리 外交의 플렉시빌리티를 爲해서 알바니아 接近을 考慮해 보는 것은 全然 無意味한 着想은 아닌것 같다.

二次大戰의 終結 當時만 해도 저 나라에는 鐵道가 없고 大學이 없었다. 近 500年에 亘한 <大터키 統治圈>下에서 나라가 없고 文化的 傳統도 없이 일리리아人이 原始的인 村落生活을 營爲해 왔을 따름이다. 소위 近代 民族國家의 形成 및 發展過程이라는 觀點에서 본다면 저 나라의 後進性은 數百年에 걸친 오스만·터키 統治의 封建的 山岳國家에서 緣由된다고 할 수 있다.

1913年에야 저 나라는 獨立을 했다. 創世紀以後 15世紀까지 알바니아는 東로마帝國의 勢力圈에 屬했고 15世紀以後 1913年까지는 터키人의 統治下에 있는 셈이다. 저 民族의 英雄인 스칸더베크 (Skanderbeg 1405-1468) 時代를 除外하곤 저들은 한번도 外勢의 干與와 抑壓을 免해 본적이 없는 文字 그대로의 弱小民族이다. 戰後 저나라의 外政이 <親유고>에서 <親蘇>로, 또 <親蘇>에서

<親中共>으로 漸々공々 그 路線을 바꿔간것은 友好를 빙자해서 压力을 加해 오는 外勢의 干与를 極히 排除하는 때문이었다. 즉 和親을 通해서 強大國의 支援을 얻는 것은 歡迎하되 그로 因해서 秋毫도 主權侵害는 當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 나라 外政의 基本方向인 同時에 알바니아 民族主義의 進路인 것이다.

1946年 알바니아 人民共和國의 樹立後 유고를 中心으로한 발칸諸國이 <발칸聯邦>을 세우려 했을때 스탈린도 同案을 支持했었다. <蘇·유關係>가 友好的이었던 저 때에는 알바니아와 유고도 아주 좋은 善隣關係를 示現하고 있었다. 例컨대 1945~48年間の 알바니아 國家豫算은 約 5²⁵/₁₀₀分之3을 유고援助에 依存해서 編成·執行되는 程度였고, 또 兩國間에는 特別한 <經濟·關稅同盟>이 結成되어 있어 共通의 貨幣를 鑄造 使用한 정도로(마치 지금 瑞西와 리히텐슈타인王國과의 諸關係와 恰似했음) 親近했었다. 즉 저때의 <유·알關係>는 마치 알바니아가 유고의 위성國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닐 정도였다. 그러나 알바니아는 1948年에 유고가 <콤민포름>에서 追放되자 것처럼 좋았던 善隣關係를 斷切하고 一朝에 蘇聯의 위성國으로 轉向했었다. 當時의 外交的 方向轉換을 알바니아는 表面에는 宗主國을 이탈한 理念上의 理由를 들었지만, 其實은 理念上의 反目보담 實利的 打算이 더 컸는 것이다. 즉 宗主國을 離脱한 強한 이웃을 견제하기 爲해서는 으름가는 後見人을 가져야 한다는 實利追求의 底意가 더 컸는 것이다. 알바니아는 그後 그와 같은 外政의 路線變更을 쫓아 內政面에서도 적지아니 體制改編을 遂行했었다. 親유고分子를 大量 肅清했는가 하면 經濟面에서도 유고

를 代身해서 蘇聯으로 부터 莫大한 援助를 얻어 工業化에 注力했었다. 實例를 들면 1957年까지의 經濟借款額 4億2200万루블을 贈与로 代置받았는가 하면 새로히 5億6,200万루블을 約束받기도 했다 (1958年 現在). 1)

그러나 위와같이 莫大한 經援을 받아가며 工業化와 産業開發을 施行해 가는 알바니아의 對蘇關係는 50年代 末期에 이미 內的으로는 破綻되어가고 있었다. 왜냐면 1955년에 후루시초프가 對유고 和解를 試圖했기 때문이다. 즉 宗主國인 蘇聯과 알바니아의 이웃인 유고가 政治的으로 經濟的으로 協同하게 될 때 알바니아는 兩大國의 必然的인 干渉과 壓力을 甚히 두려워 했기 때문이다. (알바니아의 強大國에 對한 위와 같은 否定的이고 微溫的인 態度는 其後 實際政治에 어떻게 反映되었는가? 그가 對蘇政策에서 그들의 不滿을 들어낸 것은 1960年이었다. 즉 60年6月 부카레스트에서 第三回 루마니아 共產黨 全党大會가 열렸을 때 同大會에 參席한 中共代表에게 알바니아는 秋波를 던졌는가 하면 同年11月의 모스크바 世界共產黨 大會에서는 正式으로 親中共的인 態度를 表明했었다. 저 때에 알바니아는 共產世界의 分裂을 막기 위해서 修正主義에 反하는 것이며 蘇聯의 對中共態度에 不滿을 갖는 것이 라고 그의 外交的 變節을 名分스게 辯明했지만 그 真意는 그것이 아니었다. 強大한 友邦의 支援은 切實하되 同友邦의 위협이나

註1) Papajorgji, H.: The development of socialist industry and its prospects in the Peoples Republic of Albania. Tirana/1964, p.77.

圧力은 決코 받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그 眞意요, 또한 알바니아 民族主義의 進路인 것이다.

그리하여 1961年 12月을 契機로 알바니아는 蘇聯과의 国交를 断切하고 中共側에 닥아 섰으며 여직의 蘇聯 및 東歐諸国の 經援에 代身해서 中共의 積極的인 政治·經濟的 支援을 얻었고 또 지금도 얻고 있다. 1962年 12月에는 코메콘(COMECON)을 脱退하고 65年 2月부터는 바르샤바條約機構의 諸會議에 不參하기 始作하므로써 알바니아는 事實上 東쪽력에서 孤立 되었지만 아무런 內政干涉없는 共產圈의 第二 強大國인 中共의 支援下에 진동이 없고 부담이 없는 自主的 國家發展을 꾀한 셈이다. 中共은 알바니아의 3·4次 5個年計劃을 돕기 위해 1961년부터 1970년에 걸쳐 約 3億4千萬弗의 經濟借款을 許容했고 또 兩國의 交易中에서 알바니아側의 累積된 貿易赤字를 메꿔주기 위해 特別借款을 貸与하기도 했다. 中共이 1956年에서 65년까지의 10年동안 亞阿의 非共產國家에 貸与한 借款額은 都合 2億5千萬弗이다. 그런데 中共이 1961年以後 5年동안 알바니아에만 貸与한 經援額이 2億5千萬弗을 上廻하는 額面인 것을 보면 中共의 알바니아 支援策이 얼마나 積極的인 것인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2)

이러한 經濟援助의 授惠關係를 비롯해서 알·中共의 政治的인 유대와 体制的 類似性도 불만한 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알바니아가 施政面에서 中共을 模倣하는 傾向이 아주 뚜렷한 것이다.

註2) Liess, O.R.: Albanien zwischen Ost und West, Hannover/1968, S.38f.

66年 3月 알바니아 勤勞黨 中央委가 官僚主義의 근절, 黨 및 國家 機構의 改編, 軍隊의 강화 등등 소위 內政改革案을 내놓은 적이 있다. 그런데 同改革運動의 一環에서 소위 <下放運動>이나 軍隊의 階級制 廢止 등을 實現한 것은 모두 中共의 行政實態를 示範삼은 것이라 볼 수 있다. 中央黨의 幹部가 工場이나 農村에 나가 肉體勞動을 하면서 信念을 굳건히 하고 思想을 연마한다는 소위 下放運動은 黨員의 訓練과 教化를 爲한 中國共產主義의 典型인 것이다. 또 알바니아의 中共 模倣은 그 뿐만이 아니다. 中共에서 文化大革命이 일자 알바니아에서도 67年 2月에 <黨과 政府의 革命化>라는 슬로건을 내건 알바니아版 文化革命이 있었다. 3) 勿論 그 內容이 黨과 國家機構의 改革을 目的했고 또 舊來의 弊習의 傳統을 破壞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實行過程이 中共과는 달랐지만 하여간 同運動이 中共의 文化革命을 模倣해서 <엔버·호자>의 偶像化와 그 獨裁體制強化에 利用된 것 만은 틀림없다.

위와같은 中共과의 特殊關係에서 60年代의 알바니아는 共產主義的 民族國家의 發展을 꾀했지만 70年代에 접어들어 東西政治가 繼續 緊張緩和의 추세를 보이자 알바니아의 外政도 對中共 一辺倒를 脫皮하려는 傾向을 나타냈다. 勿論 中共과의 友好를 지금도 繼續 維持하고는 있지만 中共의 對美政策이 宥和해지자 알바니아의 對中共 態度가 若干 달라지고 있는 版局이다. 즉 지난 73年 닉슨의 中共訪問이 저들 알바니아인에게 결정적인

註 3) Liess, O.R.: 前掲書, S.47ff.

쇼크를 주었지만, 그들이 對中共 一辺倒 外交를 벗어나려 한 것은 이미 2, 3年前으로 소급되는 것이다. 즉 브란트의 東方政策이 世界政治에 어필되고 또 同政策에 蘇聯과 東歐諸國 그리고 甚之於는 中共까지도 好意的으로 対応해 가는 것을 보자 알바니아는 유럽속의 孤立을 탈피하려는 方向으로 서서히 움직이기 始作한 것이다. 70年 가을 알바니아는 유고와의 關係 正常化를 위한 前哨 作業으로써 文化交流를 協議했었다. 그리하여 티라나와 유고의 프 리스티나大學間에 教育者 交流를 비롯한 相互 協力이 合意되었고 冀71年 2月에는 마침내 兩國間에 再修交가 이룩된 것이다. 4) 其後 알바니아는 繼續 外交攻勢를 取하고 있는데 한가지 특이한 것은 그들이 外交擴張의 機先을 東歐의 諸隣國에 두지않고 西歐와 中近 東 및 아프리카 諸國에 돌리고 있는 点이다. 즉 70年末을 前後해서 에티오피아와 修交했는가 하면 아프리카의 콩고-브라즈빌과 도 國交를 맺었고, 西歐의 화란, 벨기에와도 修交했다. 그리고 71年 5月에는 希臘과도 修交했고, 北歐의 노르웨이와도 外交關係를 樹立하고 있다. 5)

알바니아의 外交로선은 위와같이 70年代에 들어서서 對中共一辺 倒를 止揚하고 分明히 플렉시블해졌지만 저 나라는 지금도 의연히 中共의 으름가는 위성국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를 固守하고 있다. 今後 알바니아 外交가 더욱 活潑해져서 美國을 비롯한 西歐의 여러나라와 關係를 改善해 나간다면 하더라도 <알·中共關係>의 突然 한 惡化傾向은 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 보아 진다.

註4) Siehe, China und Ostblock, In: Osteuropa, 2/73, S. 143.

註5) Osteuropa 1/73, S. 68.

나. 유고슬라비아

東歐接近의 두번째 対象國으로써 유고슬라비아를 다루어 보는 것은 아무런 異論이 없으리라 본다. 왜냐면 48 년이래 저 나라가 내건 獨自路線은 名色 <유고 사회주의>인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融合시켜 놓은 하나의 混合體制인 때문이다. 收斂理論에 입각한 산업사회의 실제적인 典型이 찾아질수도 있는 同體制와 國策은 지금 東西政治의 인정을 받고 있을뿐더러 저나라 外交의 플렉시빌리티에는 우리외교의 接近이 可能할 수도 있다.

1948年<蘇. 유關係>가 惡化되면서 부터 유고는 저 獨自路線의 暢達을 爲해 가진 高초를 겪으면서 東西外交를 疎遠한 나라다. 內政構造의 複雜性이 酷甚함에도 불구하고 蘇聯의 大國主義에 끝내 屈하지 않은채 <유고슬라비즘>을 指向하고 있는 저 나라의 國策은 異質體制의 平衡과 同質化를 모색하는 諸分斷國에겐 興味있는 연구거리이기도 하다.

먼저 유고 사회주의의 概要를 論해본다.

유고의 정치학자인 V. 데디에르氏는 <蘇. 유關係>의 惡化 原因을 史的으로 해명하는 과정에서 兩國間의 불화가 戰後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戰爭中에 싹텄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41年의 유고革命時에 蘇聯의 지도자는 유고解放을 爲해 유고人의 봉기를 容許한것이 아니고 蘇聯의 大러시아政策을 貫철시키는 方向으로 지도했었고, 둘째 43年에 유고의 <反팍쇼人民解放評議會>가 亡命政府의 승인 거부와 國王의 帰國禁止를 宣言했을때에 스탈린은

이를 반대했었다. 세계 戰爭中에 이와같이 뿌려진 유·蘇間의 不和의 씨는 戰後에 蘇聯占領軍의 非行으로 因해 유고人の 反感을 사므로써 더욱 자랐다는 것이다. 그 위에 또 1946年 蘇聯이 제의한 <蘇·유合資会社案>이 유고경제를 蘇聯에 壓속시키려는 内容이었으니 유고人の 反발을 살것은 너무나도 當然했다는 것이다⁶⁾.

兩國人の 內的 尤대가 위와같이 벌어져 있을때, 47年 2月·유고는 不利한 2件의 合資会社 設立案에 明해야 했고 또 48年 1月에는 유고外交를 간섭하는 <蘇·유協定文書>에 調印을 강요 當렸으니 유고人の 反蘇態度가 들어나기 시작한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蘇聯은 위와같은 유고의 反발을 무시하고 48年 3月 유고주재 軍事顧問團을 철수시키는 등 一連의 抑壓的인 처사를 계속 强行했으니 유고의 反蘇感情이 마침내 表面化했는 것이다. 유고共産主義者 同盟 中央委의 다음과 같은 결의는 對蘇울티마툼格이 된 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국가인 蘇聯을 꽤 좋아하고 있지만, 우리는 역시 그에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사랑하고 있다」⁷⁾라는 것이 中央委 결의의 對蘇 서한 要旨였다.

유고의 同對蘇書翰이 伝達된 후 <蘇·유關係>는 極度로 惡化되었고

註 6) Dedijer, W.: With Tito through the War,
London / 1951, PP. 121 - 126

註 7) 加藤雅彦: 東ヨ-ロッパ, 東京 / 1970, P, 70

마침내 蘇聯은 同年 6 月 브카레스트에서 열린 <콘민포름>에서 유고를 除名한 것이다. 蘇聯의 壓力으로 인해서 다른 東歐隣邦 國도 諸交流를 단절당한 유고는 一朝에 東歐圈의 孤兒가 되었지만 티토는 이것을 빨치산時節의 저항정신으로 감내했고 유고外交의 機先을 東歐아닌 外界로 돌렸으니 저 外交가 낳은 성과가 西方援助로써 이룩한 <独自の인 유고 사회주의>요, <積極的인 中立主義>요, 또한 <非同盟 政策>이었다.

共產主義라는 理念을 堅持하면서도 國民의 利益을 위해 스린과 결별하고, 適切히 西方外交와 非同盟政策을 구사해서 유고의 獨自路線을 편지에 유고國策의 매력에 있는 것이다. 65년에 始作된 經濟改革이 이제는 그 改革推進의 영역을 넓혀 지금 政治. 理念分野까지 波及되었으니 東西體制의 收斂化과정과 그 實相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유고國策에서 多少나마 찾아 볼수 있다.

유고의 獨自的인 사회주의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것은 政治的으로는 一黨獨裁를 前提하되 可能的인 限 政治的인 自由를 保障하겠다는 것이고, 經濟的으로는 생산수단의 社會化를 前提로 하되 可及的인 自由市場經濟的인 方法을 施行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할수있다. 유고의 同社會주의를 이해하는 데는 58년의 유고共產主義者 同盟이 내건 新綱領을 檢討해보면 잘 이해된다.

왜냐면 同新綱領은 마치 유고 사회주의의 憲章과 같은 것으로서 저 獨自路線의 基本 理念을 總括的으로 집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同新綱領이 公表되었을 때 各國 共產黨은 이를 修正主義라고 심히 비난했었다.

그러나 유고는 사회주의사회 건설의 途程이 一律的인 아니고 多樣함을 주장하고 있다. 同綱領을 중심으로 유고 사회주의의 特色

을 간추려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주의의 目標는 同一하지
 만 그 目標에 到達하려는 發展途程에는 各國의 經濟發展度, 政治
 構造, 傳統과 인습 및 國民의 역사의식등등 次要인이 작용하기 때
 문에 그 발전템포와 그 類型이 나라에 따라 자기 다를수 있다는
 것을 前提하고 있다. 둘째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하나의 求心點
 에 의해서 展開되어야 한다는 持論에 반대하고 있다. 즉 同운동
 은 사회주의 諸國의 黨 상호간에 民主的인 協同을 통해서 推進되
 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주의사회 건설은 機能主義的인 制
 度的 融合을 통해서도 可能하다는 것이다. 近來의 資本主義가 산
 업을 國有化하고, 國家投資를 增大하고, 個人資本을 제한하는 등 廣
 範圍하게 그 취약점을 제거하는 方向으로 變化하고 있기 때문에
 저 經濟體制가 반드시 자기모순을 必然的으로 激化시키리라고는 予
 想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에로의 발전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民族革命運動, 그리고 사회민주당의 役割 등도
 무시할수 없는 요인이요 勢力인데, 結局 사회주의는 반드시 共產黨
 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結論이 얻어진다는 것이다.

네째 同綱領은 黨의 지도적 役割을 부정하고 있다. 共產黨에
 의한 政治權力的 獨占, 즉 그가 普遍的인 不變의 原則으로 내세우
 는 敎條主義에 反하면서 사회주의의 至上目標가 個人的 幸福에 있
 음을 강조하고 있다. ⁸⁾

註8) Meier, V. E.: Neuer Nationalismns in Südostenropa,
 Opladen/1968, S.58 ff.

同 綱領은 위의 네가지로써 独自路線의 일반적 理念을 밝힌
 외에도 유고 사회주의의 具體的인 體制面을 설명해 주고 있다.
 예컨대 유고 사회주의의 中核인 <노동자 自主管理>라든지 <노동
 자 評議會> 그리고 <經營委員會> 등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機能主義的 體制 融合을 考案한 <유고體制>의 特色인 것이다.
 生産管理를 전담하는 노동자들의 同組織體 機能을 要約說明해보면
 아래와 같다. 유고 憲法 第8條를 보면 「모든 생산수단을 사
 회화한다」⁹⁾ 라고 되어 있다. (但 農地는 個人農이 인정되어 있
 기 때문에 농토 전부가 사회소유로 되어 있지는 않다.) 생산
 수단을 사회화했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실제과정에 있어서 企業經營
 이 勞動者 조직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勞動者의 自主
 管理>인 것이다.

그래서 同自主管理는 一般勞動者 中에서 선정 構成된 <勞動者
 評議會>에 의해서 행해지고 또 同評議會는 <經營委員會>라는 企
 業 專門의 小委를 구성하여 企業實務에 임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企業의 最高機關인 同勞動者 評議會의 構成은 企業의

註 9) Reissmuller, J.G.: Der neue Zentralismus in Jugoslawien, in: Europa Archiv, Heft 22/72, S.767 ff.

規模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는 15명에서 120名이며 그중 75%가 生産現場 労働者 中에서 선정되어 있다.

労働者 評議會와 經營委員會의 主任務를 보면 労働者 評議會는 첫째 製品의 種類, 수량 및 가격 등을 결정하고, 둘째 收益의 分配방법을 결정하며, 셋째 企業의 擴張 및 그에 따른 조달을 숙의하며, 넷째 고용노동자의 해고 및 新規任用 등을 論議하고 있다.

그리고 經營委員會는 労働者 評議會가 내린 諸決定을 具体化해서 企業運營을 전담하고 있다.

이와같이 労働者 自主管理下에서는 労働者가 自主적으로 企業을 運營하기 때문에 原則적으로는 中央政府가 企業活動에 直接 간섭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러나 企業運營, 實際를 보면 大部分의 企業이 개인자본의 부족으로 인해서 銀行融資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結局은 國家의 干渉를 받게 마련인 실정이다.

위와같이 유고 사회주의는 東西체제의 長점을 模倣적으로 融合시키려는 시도를 制度面에서 보이고 있어 아주 興味로운 것이다. 유고体制은 共産黨의 独裁만을 강행하는 余他の 共産國家 体制와 다른면이 있는가 하면 의회주의를 바탕으로한 西歐의 사회민주주의와도 確然히 다른 것이다.

로자. 룩셈부르크女史가 제창한 참된 마르크스主義에도의 一類型이랄
까 아니면 西方世界에서 흔히 우리가 쓰는 말인 修正論争期の 左
派사회주의的인 一類型이라고 하겠다.

党的 独裁的인 權威를 가지고 五個의 民族, 四個의 言語, 三個의
종교 등 構造的 複雜性を 抑制명형해 가면서도 유고사회주의의 核
心이 無産階層의 權益을 위한 <民主性>에 있다라고 못 박고
있다. 그리고 또 同유고体制의 至上目標을 <個人的 幸福>에 두
었고, 그 實現을 위해서 制度的 合理化를 피하고 있는것을 보면
東西体制의 收斂化가 시행되고 있는 示範国같기도 한것이다.

다른 共產国家와는 달리 經濟行爲와 生産수단의 實際가 위와같이
특이한가 하면 다른 한편 유고의 外政도 東西 兩大國의 影響을
피하면서 國勢를 擴張하려고 특이한 方法으로 發展해온 것이다.

우리는 이를 쉬이 유고의 <非同盟政策>과 <積極的인 中立主義>
外交라고 불렀지만 50年代 및 60年代 초엽의 유고 非同盟主義
는 60年代 後半과 70年代에 들어서서 더 플렉시블해지고 있는
것이다. <非同盟>이라는 原則을 고수하면서도 蘇聯과의 和解後에
東歐圈의 거의 모든 나라와 再修交했고 西歐에서도 美蘇의 直接的
인 政治的 影響을 받지 않는 나라와 修交한後 지금은 東西歐의

거이 모든 나라를 비롯하여 <반동>을 樞軸으로 유대된 第三世界
 의 諸國과 修交하고 있다. 70年代에 들어서서 유고外交가 進一
 步한것은 알바니아와 再修交하고서 中共에 닥아섰다는 点이며 나가
 아선 非同盟的 開發途上國들과 活潑한 交易關係를 갖게 되었다는
 点이다. ¹⁰⁾ 69年3月에 체결된 <中·유 通商協定>에 의해서 行
 해지는 中·유交易이 71年6月 유고의 外相 테파바취 (Тервац)
 의 中共訪問을 계기로 더욱 活潑해졌으며, 中共의 발칸에 처한 自
 由行爲를 增大시켰을 뿐만 아니라 알바니아, 루마니아, 유고 三國
 이 中共과의 友好關係를 다짐하므로써 東歐共產國家의 外政的 進路
 에 새로운 力学關係를 形成해주고 있는 관국이다. ¹¹⁾

베루, 닷세르 그리고 스카루노 없는 <반동世界>에서 티토의 非
 同盟主義는 그 威力을 상실해버린 版勢이지만 西로 부터는 브란
 트의 積極的인 지원을 받고 東으로부터는 周恩來의 幷호를 받는
 티토外交는 全유럽의 평화 안보회의에서 그 一役이 크게 기대될
 분더러 그의 정치가 산업화사회를 지향한 平和的인 東西타협에
 선구적 役割을 할지 모른다.

註 10) Poleksic, N.: Zusammenarbeit mit den Entwick-
 lungsländern, in: Internationale Politik, Heft 548
 (5. Febr. 1973), Beograd/1973, S. 3 - 5

註 11) Siehe, Chronik, in: Osteuropa 2/73, S. 144

다. 루마니아

루마니아에의 접근은 가능한가? 라고 물었을때 그것은 고려의 여지가 있다. 라고 답할 사람이 우리의 外交官中에는 많으리라 본다. 共産黨을 이탈하지 않은채 中. 蘇紛糾를 적절히 이용하면서 민족공산주의의 실현을 위해 對西方 外交를 能小能大 하게 행해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다코 로만니즘> (Daco-Romanism) 의 문화적 전통을 굳건히 이어 가려는 그들이 때로는 분명히 反蘇경향을 보이면서 까지 그들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이유는 그들이 슬라브족의 유일한 라틴민족이라는 민족적 긍지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미 中. 蘇紛爭이전에도 루마니아가 蘇聯을 그리 탐탁치 않게 여기면서 그들의 自主路線을 구축할 수 있었던 데에는 몇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 二次大戰中에 蘇聯이 루마니아의 東部領域<벤티사라비아>를 탈취했었다는 領土的 感情이 있고 둘째는 루마니아 共産黨은 蘇聯派와 國內派의 대립 암투끝에 53년 이래 계속 國內派가 主導權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며 셋째는 58년에 蘇聯의 루마니아 駐屯軍이 철수하므로써 蘇聯의 간섭을 배제할수 있었던 것이고, 넷째는 戰後 저 나라의 기술교육이 실효를 견우어 많은 기술자와 경제전문가가 배출되므로써 저들의 경제成長度가 다른 이웃들 보다 빨랐다는 점이다.

이 네가지 이유로써 루마니아는 對蘇關係에 있어 60年代 初부터 自主的이었고 또 다른 공산국가보다 국민생활을 훨씬 향상시켰

기 때문에 레지政權이 민족공산주의의 기틀을 짚수 있었던 것이다.
65년 3월 레지 (Gheorghiu Dej) 의 死去후 N. 초세스쿠 (N. Ceausescu) 가 그 뒤를 이었는데 그는 레지가 펴놓은 루마니아의 自主路線을 더욱 폭넓게 발전시켜 60年代 후반이래 그 민족공산주의의 모델을 세계인의 뇌리에 심어놓은 셈이다.

루마니아의 민족공산주의가 中.蘇紛糾를 이용해서 어떻게 굳혀졌든가 하는 그 외교전략을 살펴 보기로 한다. <中.蘇紛爭>의 발단은 평화공존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대두된 때부터라고 할수있다. 56년의 第20次 蘇聯共産党 大會에서 <平和共存論>이 거론되어 <스탈린 格下運動>이 시작되던 때부터 共産圈 内部에 지도권 분쟁이 싹텄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후 60年6月 第3次 루마니아 공산당 대회에 의반으로 참석한 中.蘇代表들은 그 자리를 빌어 소위 이념분쟁의 砲門을 연바 있다. 즉 蘇聯側 代表인 후루시초프首相이 「中國人은 近代戰爭의 意義를 모르는 盲目的인 教条主義者」라고 비난하자 中共側 代表인 彭真 北京市長은 「中國人은 抗日戰과 韓國戰爭을 통해서 近代戰의 実相을 세계 어느 국민보다도 잘 체험한 국민」이다. 라고 응수하므로써 同大會를 수라장화 했었다. 12) 그래서 이 표면화된 中.蘇對立은 同年 11月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공산당대회에로 번져서 필경 中.蘇의 政治的인 協力이 袞別되는 사태를 자아낸 것이다. 당시 中共代表였던 鄧小平 党書記의 反蘇연설은 공산주의의 실현 과정에서도

註12) Siehe, Der Dritte Kongress der Rumanischen KP.,
Inr Osteuropa, Heft 11-12/1960, S.801 ff.

민족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유명한 연설이 되었다. 「세계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한 蘇聯共産党的 存在는 인정한다.

그러나 党相互間的 關係에 있어서 少数가 多数에게 그 少数를 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왜냐면 각국의 党은 各自 独立的인 것이기 때문이다.」¹³⁾ 라는 내용이다.

中. 蘇關係가 이같이 破裂되어가자 당시 루마니아는 兩大國의 是非에 걸어서는 公的인 論평을 회피하면서 中立을 지켰지만 暗暗裡엔 점차 間接적인 對中共 접근을 시도 하였다. 즉 63年3月에 먼저 中共의 우방인 알바니아와 大使交換을 했고, 同年 5月에는 中共과 무역협정을 개정 체결하였다. 그리고 同年 6月 울브리히트의 70回 生辰을 계기로 會同하게 된 東歐圈 수뇌회담에도 루마니아는 不參했었다. 또 同年7月 中. 蘇분쟁에 관한 中共측의 海명서인 <20個項>을 다른 東歐國家는 蘇聯의 지령에의해 공개하지 않았으나 루마니아 만은 그 全文을 自國의 신문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蘇聯을 경원하면서 中共을 두둔하는 루마니아의 외교 轉술은 그後에도 꾸준히 계속되었다. 64年3月 中. 蘇對立의 轉化를 轉개하기 위해서 루마니아는 그 轉교사절단을 北京에 보내기도 했고 그後 中共에서 <문화대혁명>이 일자 他國에 대한 轉정 불간섭이라는 이유를 들어 轉정 轉립을 지키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69年6月 모스크바에서 세계공산당 대회가 열려 <국제

註13) Mehnert, K.: Peking und Moskau, in: Osteuropa, Heft 11-12/1960. S. 729 ff.

공산주의운동>에 있어서의 中共의 추방이 거론되자 中共의 참여없는 同大會를 세계 공산당 대회라고 命名한것 自体가 모순이라고 公言하면서 蘇聯의 宗主國的 계략에 反對했었다. 14)

68年 8月 바르샤바條約軍隊의 체코強占이 行해졌을 때에도 루마니아는 堂堂히 蘇聯의 中共비난을 반대하면서 사회주의諸國의 同等한 主權行使를 完강하게 주장했었다.

결국 루마니아의 외교전략은 바르샤바機構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諸國의 정치적 유대강화를 제창하면서도 蘇聯의 大國主義的 권위와 擧력국가 간섭에 반대하는 경향이다. 저들이 얼마나 反蘇的인가는 63년이 후 두두러지게 나타난 루마니아 國內의 <非러시아化政策>에서 역역히 알수있다.

從來에 러시아語와 露文學 연구를 독립적으로 전담했던 <막심 고르기研究所>를 브카레스트대학의 슬라브文學科로 폐합했고 또 才一外國語를 露語 대신 仏語로 교체한것 등은 슬라브系의 知的 정신적 영향을 배제한다는 實証인 것이다. 그리고 「민족의식은 이데올로기에 先行한다」 15) 라는 말을 저 나라의 官吏들이 공공연하게 했고 또 蘇聯, 체코, 폴랜드가 행하는 西方무역을 餘他的 東歐諸國은 왜 除制받아야 하나를 크게 불평했던 사실등은 결코 슬라브족에 대한 친근감에서 한 말은 아닌 것이다.

註 14) Siehe, Europa Archiv, Heft 17/69. S. 611

註 15) Osten, W.: Weltkommunismus 1964, in: Osteuropa, Heft 7-8/1964. S. 502 ff.

루마니아 외교의 向方이 위와 같이 좀 反蘇的이고 中蘇紛爭을 이용하여 공산주의 속의 민족국가 발전을 피하는 自主路線이지만 그것만이 全部는 아니다. 저 외교의 특색이 블럭内에서의 그러한 민족의 자주로선을 찾았다는 데에 있다가보다 오히려 블럭을 이탈하지 않은채 블럭内 兩大國의 대립을 이용하여 東歐 라틴민족의 自主·自立을 선언하고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西方外交에 나섰다 는 데에 있다. 64年以後 美國을 비롯하여 프랑스, 이탈리아 등 상관계를 갖드니 마침내 67年1月에는 西獨같은 나라와 國交를 수립했다는 사실이다. 루마니아가 처처럼 西方外交에 나선것은 오직 自國의 경제건설을 위한 實利追求인 것이다. 저 나라가 <코메콘>을 이탈한 後 그 工業業을 계속 발전 확장해 갈 수 있었던 것은 西方과의 경제협력 및 기술제휴에서 얻은 성과인 것이다. 저들의 對西方 외교중에 세계인의 눈을 끌었던 가장 큰 사건은 69年8月 닉슨大統領을 초치환대하고서 東歐 라틴民族의 自主路線을 온세계에 거듭 한번 公表했던 사실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 近來의 루마니아가 알바니아 못지않게 中共과 친근해졌다는 것도 注目되는 點이다.

71年5月 루마니아 共產黨은 창립 50周를 성대히 기념했었다. 50周年을 기념한 다음 달에 초세스구는 巡訪外交에 登程하여 中共, 北越, 蒙古, 北韓 등을 방문하고 盟邦과의 유대강화를 다짐했었는데 특히 中共과의 去來에서 가장 實利를 찾았었다. 즉 70年11月 <中·루>間에 체결된 2億弗의 無利子 차관과 기

술협력의 원할추진을 다짐하는 同親善訪問에서 초세스구는 平等 不間
間涉 主權존중의 諸原則을 遵守하는 우호증진을 다짐했고, 軍事블럭
의 해체와 盟邦으로 부터의 蘇聯軍隊의 철수를 역설했었다. 16)

사회주의 국가군의 국제주의를 강조하면서도 大國主義가 마치
偏狹한 나쇼날리즘처럼 주도권 분쟁을 일삼는 데에는 적극 반대한다
는 것을 단언하는 초세스구의 政治에는 공산주의적 민족국가의 理
想이 뿌리 깊히 박혀 있는것 같다. 「NATO 와 바르샤바의 軍
事機構가 해체한다 하더라도 軍隊는 의연히 到處에 존재할 것이
니 反帝國主義 防禦戰을 人民戰爭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바르샤바
機構에 加盟된 國家는 아니든 間에 모든 사회주의 國家는 군사협
력을 강화해야 한다.」 17) 라고 역설하는 초세스구는 바르샤바條約
機構에 성실할 것을 다짐하는 공산주의자다.

그러나 그가 同바르샤바機構가 항구적인 것이 못되고 잠정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단언하는 것을 보면 蘇유립 안보회의의 進전에
따른 東블럭 구조의 변동을 내다보는 東歐의 偉人같기도 하다.

註16) siehe, China und der Ostblock in : Osteuropa, Heft
2/73, S. 144.

註17) Chronik, in : Osteuropa, Heft 1/73, S.55.

3) 接近에 로의 타크틱一考

筆者는 앞의 序論에서 우리外交가 좀더 플렉시블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国力培養과 다른 한편으로는 南北間의 異質體制를 초극하기 위한 肯定的인 内政改革이 뒤따라야 한다고 論及한 바 있다.

그리고 또 二章에서는 東歐諸國中 為先 經濟·文化 交流일지라도 우리가 어느 나라에 먼저 接觸試圖해 볼 것인가를 三個 對象國을 選定하여 그 外政的 特徵을 概觀 把握해서 叙述해 보았다.

東歐圈에서 가장 弱小하고 後進的인 알바니아가 民族主義的인 發展 傾向에 제일 敏感하기 때문에 그를 接觸 對象國으로 選定했고 그리고 유고와 루마니아는 中·소의 政治的 影響을 적게 받으면서 "自主的인 社會主義"와 "民族共產主義를 쫓는 나라이며 또 東西 外交에 가장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選定한 것이다. 이들 세나라와 우리와의 国力을 比較해 보면 알바니아는 우리보담 下位이기 때문에 經援條件으로써 接近의 初段階的 難關을 克服할 수 있지만 余 他的 二國과는 우리가 오히려 容易하게 닥아서야 하는 판이다.

接近해서 協同하고 相互의 理觸가 增大됨으로써 協同으로 發展하는 것이 外交關係의 通例라고 할진대, 協同한다는 것은 언제나 對等하고 <相對的>인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政治理念의 對決때문에 西方世界의 弘報와 宣傳은 東歐의 共產體制가 그 獨裁性과 不當性으로 因해 自體內의 폭발로써, 특히 朝鮮內 部의 抵抗을 通해서 被滅해갈 것이라고 共產世界를 批判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東歐體制 沒落에 대한 西方人의 觀念도 희미해

것을 뿐 더러 共産世界의 破滅을 그려본다는 것이 西方世界에서도 無意味해 졌다」고 베르린大學의 經濟學者이며 同時에 收斂理論家인 탈하임 같은 (K.C. Thalheim) 教授가 斷言하고 있다. 18)

우리時代의 精神思潮와 政治思想의 嚴然한 一部가 되어있는 東歐 休敍를 否定하려는 態度는 이제는 非合理的인 版勢가 되었다.

그렇다면 理念과 休敍가 다른 저들과 修交하고 協同하려는 지금 外交上의 細密한 <테이다>만 가지고 협상하려는 것은 너무나도 艱難한 策略인 것이다. 新統一政策의 樹立을 위해서 아니 새로운 政治形態의 摸索을 위해서 모든 分斷國家는 各自 그 外交的인 國家理性만을 좇을 것이 아니고 世界의 모든 國家에 紐帶되는 兩 擧의 社會理性에 重해서 外政의 向方을 찾아야 할 時點에 이 르른것 같다. 筆者의 생각으로 이 길만이 産業社會의 體制的 對 立을 초극하려는 眞正한 努力인 同時에 世界秩序를 單一化하는 아 니 新政治體制를 낳으려는 眞實한 試圖가 아닌가 한다.

아래의 各項에서 東歐接觸을 實際적으로 어떻게 試圖할 것인가를 論하기에 앞서 지금까지의 우리 外交가 어떠한 취약점을 갖었으며 얼마만큼 偏狹한 것이었는가를 간추려 본다.

첫째, 七·四聲明以前의 우리外交가 對西方 一辺倒였고 事實上 對北關係에 있어서 單獨代表權을 내세워 온 때문에 소聯을 비롯한 東歐國으로 부터는 계속 非가티브한 인상을 받아들인 것이다.

둘째 그 위에 또 우리政府의 弘報活動이 北韓의 宣傳攻勢를 凌加하지 못했던 때문에 共産國은 勿論이요 諸中立國 그리고 一部 의 西方國家에서 까지도 韓半島의 트리플·메이커는 無인것 같은

註18) Thalheim, K.C.: Um die Zukunft unserer Gesellschafts und Wirtschaftscrnung, In: Politik und Zeitgeschichte, Heft B20/73 (19. Mai 1973), S.23

認識을 준 것이다. 七·四 聲明以後 尙今 南北對話가 進行되고 있고 또 우리의 弘報協會가 踰足되어 民族文化의 業績과 近年의 發展相을 계번 内外에 弘報하고 있는데도 西유럽의 一部 國家에서 까지도 1950年의 韓國戰爭을 마치 南쪽이 挑發한 것처럼 誤認하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인 것이다.

官民이 邵合해서 弘報事業에 尽力하여 6.25 兩假같은 現代史的 發生事를 남에게 事實대로 認識시켜야 함이 絶실히 要望되는 판국이다.

勿論 對東歐 交流를 試圖하는 마당에서 위와 같이 歪曲된 韓國觀을 改善하는 作業이 매우 重要하지만 우리의 참된 모습을 共產主義者들에게 알리기에 앞서 한가지 先行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自由民主主義를 좃고 있지만 北韓을 우리와 同等한 파드너로 認定하고 있다는 것을 北韓의 盟邦인 東歐人에게 確信시켜주는 問題다.

이 問題는 結局 우리가 未久에 어느 形態로나 北韓을 法的으로 承認해야 한다는 重大問題이기 때문에 그 仔詳은 다른 테마에서 다루기로 하고 爲先 此項에서는 東歐人에 어떻게 接近해야 하느냐는 <타크틱> 問題를 一考해 본다.

가. <유엔>을 本據地로 하는 接近試圖

지금까지 우리의 유엔 外交는 우리만이 韓半島에 있어서 唯一한 合法政府라는 소위 单独代表權을 내세우는 것이었다. 이를 國際政洽에서 通用시키기 위해서 우리편 <支持하는 票만을 얻기 爲한>

外交를 택은 것이다.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이는 北韓政權의 代表가 유엔에 오는 것을 한사코 막기 위해 아프리카의 이름 모를 나라들의 票를 動員하는 作議이었다. 勿論 이 <支持票의 動員作業>이 50年代와 60年代의 權威政治時代에는 効用없는 것은 아니었다.

大部分의 西方國家와 一部分의 亞阿盟邦들이 우리의 单独代表權 主張을 同調해 주었으므로써 國際政治에서 우리는 主權國家的 位置를 그만큼 굳힌 것이요 또 그 友邦들의 經援과 諸協力을 통해서 現 70年代의 道약을 期約한 바탕을 이루기도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저 <支持票의 動員作業>에는 莫大한 經費가 所要되었던 것을 우리는 看過할 수 없다. 만약 저 經費를 復興事業에 利用했다면 지난 60年代의 經工業的 建設 못지 않게 우리의 重化學工業도 이룩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結局 저러한 우리의 外交路線은 60年代 國際政治의 趨勢를 따랐던 것이지 全的으로 政策 그 自体의 貧困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70年代에 접어들어 國際政治의 多元化 傾向이 東西列強의 力干係를 크게 變形시키고 있는 지금 이제는 우리의 外交戰略도 變換해야할 時期에 到來한것이다.

즉 支持票의 動員作業을 止揚하고 보다 次元 높은 實利外交에 나서야할 때가 온 것이다.

유엔 外交의 力點을 어디에 두고 對東歐 接觸을 試圖할 것인가를 筆者는 아래와 같이 構想해 본다.

첫째 소련 및 東歐國의 對韓國 <이미지>를 改善하기 위해서는 早晚間에 우리는 北韓을 어느 形態론가 合法的으로 承認한다는 大前提를 세워야 한다. 왜냐하면 7.4 声明後 지금까지의 默示的 承認 形態만으로는 南北韓의 外交活動이 到處에서 衝突하기 마련이며 끝내 東歐國의 親心を 살 수는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未久에 어느 形態론가 北韓을 承認한다는 大前提下에 우리의 外交戰略을 企劃한다면 유엔에로의 南北韓 同時招請案을 우리는 受諾해야 한다.

세째는 그리하여 美國이 소련과 妥協해서 소련으로 하여금 韓國의 對東歐 接觸을 許諾하는 背信號를 내리도록 주선해 주어야 하며

네째는 韓國의 駐유엔 및 駐美 外交官이 지금까지 亞阿의 支持票 獲得에 傾注했던 努力을 소련, 東歐國 및 影響力 있는 諸中立國 接觸에 注力해야 한다.

다섯째, 韓國의 弘報事業은 民族文化와 芸術的인 偉業 그리고 現代的 發展相을 英, 仏, 獨, 쏘, 西, 아랍, 日, 中語 등으로 刊行物 化하여 文化民族的인 國威를 宣揚하되 특히 南北對話의 主導國이 南韓임을 事實 그대로 世界人에게 弘報하여 우리 外交官들의 위와 같은 活動을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여섯째, 알바니아 같은 民族主義的 發展에 敏感한 나라에게는 대담한 經濟援助를 約束해서 友好關係를 맺어가되, 同알바니아를 通해서 韓·中共關係의 改善策을 摸索할 수도 있다.

일곱째, 國聯이라는 東西方 各國代表會合場의 싸롱外交를 通해

서 共產國과의 諸問題를 妥結하는 실마리가 풀려야 한다.

例컨대 우리가 아직 東歐國과의 正式 修交國이 아니니 만치 現段 階으로써는 諸三國을 통해 유고 루마니아 같은 나라와 <빠터制 貿易> 같은 것이 可能토록 周旋해야 하고, 또 때로는 東歐 各國의 代表들과 直接 協商해서 學藝人的 相互 入國許容, 스포츠交流 등을 交渉할 수도 있다.

結論컨대 우리政府가 理念을 超越해서 오직 實利를 쫓아 世界 諸國과 交流할 것을 政策的으로 決定한 以上, 플렉시블한 外交活動을 展開하는데는 國聯이라는 広場싸롱外交가 가장 重要한 役活을 해야 하며 또 實際적으로 저 곳에서의 諸接觸試圖가 가장 容易하다 하겠다.

나. 西獨의 東方政策에 便乘하는 方法

國土 및 民族分斷이라는 共同運命을 갖었기 때문에 西獨과 韓國과의 國交的 紐帶는 지금까지 比較的 두터웠다고 말할 수 있다. 勿論 지난 67年の <東베르린 間諜 拉致事件>으로 因해서 한동안 韓獨間의 友好에 금이 간것같은 時期가 있기는 했지만 韓獨間의 經濟協力 또는 人力輸出을 통한 獨逸復興에로의 協調 등으로 兩國間의 友好關係는 繼續 維持되고 있는 狀態다.

이와 같은 兩國間의 오랜 友好的인 外交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東歐接觸을 脈絡裡에 간청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브란트가 東方政策을 내걸고 東歐와의 화해를 통해 對東獨關係를 改善했고 유럽의 平和·安保에 寄與할것을 다짐한뒤 우리나라에서는

그의 東進政策을 關心깊게 다루어 왔다. 그래서 우리는 西獨의 統獨 및 東方政策 (Deutschland - und Ostpolitik) 을 比較的 잘 理解하고 있는 편이다.

同東方政策을 要約, 說明해 보면 아래와 같다. 世界의 모든 民族에게 아직까지도 <國民 國家의 理想>이 저바려 지지 않고 있는 지금, 西獨政府가 <一民族 二國家論>을 내놓은 데에는 세계속의 유럽, 유럽속의 두 獨逸이라는 實存在를 直視한 깊은 理由가 있는 것이다. 히틀러獨逸의 罪過때문에 諸隣邦의 미움을 산 獨逸이 卞력體制가 嚴存하는 現 狀況下에서 分斷된 그 民族의 再結合을 試圖한다는 것은 不能之事라는 「實際狀況을 再認識」한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爲先은 分斷을 固定化하는 結果이지만 兩쪽의 離散同胞에게 좀더 自由로운 生活條件을 부여하기 위해서 東獨을 承認하고 그와의 諸關係를 規制한 것이다. 그리고 分斷의 固定化일지언정 그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보다도 더 自由로 行動할 수 있기 때문에 東歐諸國의 諒解를 얻으려고 西獨은 東方에 和解를 請한 것이다.

즉 東方과 화해해서 協同할 수 있을 때 부지런한 그들이 全유럽의 平和를 위해 유럽學級의 優等生役을 하겠다는 心算인 것이다. 西獨의 同政策은 위와같이 平和에로의 意志이기 때문에 지금 世界人의 讚揚을 받으면서 繼續 東進하고 있지만 果然 同政策이 第二段階의 諸計劃을 成功的으로 이끌것이며 나아가서는 東西의 卞력體制가 存続되는 속에서도 어느形態론가 統一獨逸을 이룩할 것인지는 매우 의문인 것이다.

西獨이 顯하는 第二段階의 對東方計劃이 무엇이며 또 저들이 요즘 構想하는 新統一政策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要略해 보기로 한다.

브란트가 노리는 第二段階의 實利는 全유럽 安保會議와 減軍會議에서 能小能大한 <탈레이랑役>을 하여 中歐에 있어서 獨逸人の 自由行為圈을 擴大하는 問題다. 그러나 그에 앞서 西獨이 現段階에서 先먼저 試圖할 것은 지금까지의 去來를 바탕으로 저들 諸國과 經濟·文化交流을 다지는 問題, 그리고 그 다음엔 同交流를 바탕으로 저들 하나 하나와 適期에 修交하여 外易增大의 円滑을 期하는 問題이다.

72年末 現在의 獨逸貿易高만 해도 12億弗인데 今後의 交易趨勢가 加一層 上昇될 것은 勿論이며 東獨과 競爭적으로 對東歐 技術協力 및 合作投資 등을 活潑히 實行해 갈 것은 分明하다.

그러나 西獨의 이같은 活動이 한편으론 東歐 中小國의 工業化에 크게 寄與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西獨의 貿易收支가 最大限으로 늘어나는 結果인 것이다.

달리 말하면 東西의 緊張緩和趨勢에 便乘한 西獨의 東進政策이 政治적으로 것처럼 양보하면서까지 期於히 저들과 和解한 裏面에는 經濟적인 側面이 크게 作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勿論 西獨의 위와같은 對東歐 協力計劃이 順調롭게 進行될 것인가의 여부는 結局 모두가 緊張緩和 무드의 持續에 따른 東西情勢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東方政策의 第一段階를 초극하고 난後 近來에 西獨의 執權党内에는 소위 新統一政策論이 抬頭되고 있는데 이를 簡略하게

풀이 해보면 다음과 같다. 베르린 대학의 少壯學者인 H. 하이만 (H. Heimann)에 의하면 兩獨體制가 存続되는 속에서도 兩獨의 內的 變換과 異質的 社會體制의 收斂化的 發展이 遂行되기만 한다면 東西獨은 平和的인 方法으로 分斷을 초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兩獨 社會制度의 수렴화적 發展은 必是 社會主義와 資本主義間의 새로운 政治形態를 낳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19)

結局 하이만의 These는 수렴理論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수렴理論이 産業化社會의 單一化 하는 體制 類似性과 수렴화 傾向을 體系化한 新學說일 뿐 더러 事實上 지금 經濟構造面에서 東西體制的 수렴현상이 뚜렷히 일고 있는 것을 보면 하이만의 假說이 아주 허황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東西獨이 內政面의 수렴화를 통해서 外政的인 對立을 초극할 수 있고 또 통일된 <새 獨逸>이 內政的 構造는 兩體制的 Synthese 型을 갖되 外政的으로는 東西政治의 橋梁役을 할 수 있다고 立論한 하이만 理論을 本論稿의 結論部分에서 자상히 論及하기로 한다.

브란트의 東方外交가 平和政策의 定向에서 추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世界人의 성원을 받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對東歐關係의 實態를 보면 히틀러獨逸의 過去가 아직까지도 東歐人의 뇌리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東歐는 獨逸人의 接近을 어느 面에서는 경원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도 事實이다.

註19) Heimann, H.: Demokratischer Sozialismus in Ost und West, in Politik und Zeitgeschichte, Heft B18 / 73 (5.5. 1973), S 26

그러기 때문에 西歐과 東歐關係가 아직도 저러한 狀況인 지금 우리가 同政策에 便乘하려는 것이 可能할지 어떨지는 未知數지만 何如間 "본"의 東西外交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 있는것 만은 틀림 없는 事實이다.

다. "본"을 통한 經濟·文化·體育 交流의 接觸 試圖

1955年 美·英·仏·소와의 國家條約을 통해서 占領軍의 統治를 벗어난 오스트리아는 永世中立을 萬邦에 宣布하고 僻處政治의 干涉을 避해 가면서 小國的 福祉國家를 建設한 代表的인 나라이다.

오스트리아의 中立은 1815年 빈會議가 議決한 瑞西의 中立과는 달리 完全한 國際法上的 保障이 없는 一種의 <軍事的 中立>이기 때문에 中立的인 Status를 維持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努力이 必要한 中立形體다. 그러나 往昔 老大帝國의 文化的 傳統을 잘 이어가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지금 東西關係의 平和的 調整을 担当한 影響力 있는 나라가 된 것이다.

이 나라는 地政學的으로 보나 또는 歷史的인, 文化的인 諸關係에서 보나 東歐와의 友好關係에서 만이 이 나라의 밝은 來日이 약속되어 있다. 그러기에 이 나라는 國家條約 成立後 東西解氷의 契機에 서서 東歐諸國과의 干係 正常化를 꾀했었다.

名色 中立國이라고는 하지만 카톨릭의 國民精神을 바탕으로 嚴然한 西方國家의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런데 親西方國家인 이 나라가 그 歷史的인 緣故를 좇아 東歐各國과 맨먼저 友好關係를 回復한 것을 보면 오스트리아의 外交的 테크

덕에서 우리는 小國의 主權國家의 拔擢方法과 對 列強外交의 技巧
를 擧得할 수 있지 않나 한다.

62年에 불가리아와 修交한것을 비롯하여 63年엔 루마니아,
65年엔 체코 등과 國交를 正常化 했으며 지금은 東獨을 除外한
東歐諸國과 修交하여 友好關係를 示現하고 있다.

특히 유고와는 65年以來 査証發給없이 兩國民의 出入國이 規制되
어 있고 헝가리와도 71年以來 査証없는 出入國을 制度化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正式 修交가 없는 東獨과도 社會·文化交流는 頻繁히
하고 있으며 아마 今年內에는 正式 修交를 이룩하리라고 觀測된다.

그리고 또 오스트리아가 中共을 承認했고 北韓과도 交易을 하고
있는 점은 우리의 至大한 關心事가 아닐 수 없다.

71年末에 中共을 承認하고 大使交換을 했으며 69年以來 北韓과
도 通商協定이 締結되어 尙今 "빈"에는 北韓의 通商使節團이 常
駐하고 있는 實情이다.

우리와는 1966年以來 正式으로 修交하고 있으나 國交開設 以前
에도 經濟·文化交流의 이름아래 우리나라의 많은 留學生을 받았었
다. 특히 傳統的인 카톨릭國인 오스트리아는 <카톨릭 婦人會>의
이름으로 韓國의 많은 敎會事業을 도왔고 또 카톨릭會의 獎學生을
받아드려 敎育事業에 寄與한바도 적지 않다.

오스트리아와의 위와 같은 돈독한 紐帶를 基底로 해서 우리는
그의 中繼를 통해 經濟·文化交流的인 東歐接觸을 시도할 수 있다.

例컨대 東歐側의 需要에 따라 우리의 適正商品을 <파트너制 貿易>
形式으로 輸出할 수도 있고 또 우리側의 需要에 따라 設令 東歐

側의 原料 또는 半製品이 他地域의 것 보담 高價일지라도 去來를 爲한 去來의 이룸아래 輸入할 수도 있다.

그리고 文化交流의 이룸아래 學者 및 演芸人의 來往을 交涉할 수도 있다.

즉 東歐와 우리나라의 兩地域에서 開催되는 學術大會와 藝術祭에 兩쪽의 當該人士들이 오갈 수 있는 特別 出入國을 請願 또는 許諾할 수 있고 또 體育人의 大會參席 및 博覽會 參加 등을 交涉할 수도 있다. 그리고 더욱 重要한 것은 文化交流의 실마리가 풀리는 대로 東歐地域에 留學生을 派遣하는 問題다.

우리가 안고 있는 政治的인 特殊性 때문이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東歐國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自体가 우리의 東歐接觸에 커다란 弱點인 것이다.

“빈”에서의 中繼를 통해 「리틀 엔젤스」같은 우리의 어린이 民俗藝術團이 西유럽 公演에 이어 “빈”을 거쳐 “비오그라드”, “브카레스트” 등지를 巡訪할 수 있다면 한국의 <이미지> 改善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奧帝國(1867-1918) 時代에 中·東歐 및 東南歐의 14 個民族을 다스려본 大帝國的 經驗이 있고 게르만과 슬라브의 混合에서 오스트리아의 政勢와 強忍性을 가진 오스트리아人은 文化民族의 政治的 劣勢와 逆境을 同情할 줄 아는 民族이기도 하다.

오스트리아와의 紐帶에서 對東歐 接觸의 실마리를 풀려는 問題는 우리 外務當局의 各별한 研究作業이라고 筆者는 본다.

4. 結 論

筆者는 第一章인 序論에서 <개방적 외교전략>에로의 문제를提起했다. 즉 従来の 方式대로 外政이 內政과는 동떨어진 別個의 카테고리에서 다루어질수 없다는 것을 論述한 것이다. 理念과 體制를 초월해서 우리의 實利를 쫓아 東歐圈에 接近하려는 지금, 우리의 對等한 과-드너가 될 者들이 우리를 公正한 相對者로 認識토록 우리의 對共態度를 고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統一戰略에 연결지워 說明한 것이다. 그리고 第二章에서는 우리의 東歐接近 可能地域으로써 알바니아, 유고, 루마니아 등 三國을 挾하여 同三國의 外政的 特殊狀況을 檢討했고, 第三章에서는 對東歐接近에는 어떠한 外交 채널을 이용하고 또 어느곳에 東歐接近의 拠点을 두고 活動할수 있느냐는 戰略的인 面을 論해보았다. 結論부분인 本欄에서는 우리의 國策은 如前히 反共의 바탕위에 세워가되, 우리의 東歐接近이 者들東歐人에게 納得되기 위해서는, 오래토록 지녀온 우리 對共戰略의 偏狹性을 어떻게 우리 자신이 탈피해야 할것인가를 論해 보련다. 이 打開策으로써 筆者는 플렉시블한 對共產圈 外交에는 포지티브한 內政改革이 뒷바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收斂理論에 立脚해서 立論코져 한다.

共產主義者들이 말하듯이 오늘날의 收斂理論은 부르주아 理念의 早期理論이 단순히 論理的으로 繼續 發展한 것뿐이라면 何等 論議의 價值가 없는것 이지만 戰後 世界各國의 經濟·社會的 發展이 實際로 收斂化 경향을 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면 收斂理論이 결코 허

황한 학설은 아니라고 할수 있다.

収斂理論의 學理的인 註解²⁰⁾는 省略하고 東西世界の 社会的 發展이 어느만큼 類似하며, 同현상에서 資本主義와 社会主義의 接近과 収斂이 어느만큼 可能한가를 实例를 들어 보련다.

収斂理論家들은 兩体制의 經濟的인 메카니즘이 平衡되기 마련이라고 主張하는데 이것은 두 体制가 모두 生産活動의 實際에 있어서 <利潤>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共產社会의 企業實態를 보면 其實 중앙집권적 計劃經濟体制인 데도 利潤의 增大를 위해서 企業의 管理体制를 改善 試圖하고 있는 實情이다. 蘇聯의 Lieberman 理論, 불가리아의 Kunin 經營改編論, 유고의 소위 競爭 社会主義 (Konkurenzsozialismus), 체코의 市場 定着的 社会主義 (Marktorientierter Sozialismus), 그리고 東獨의 新經濟政策등이 그 的中한 例라고 할수 있다. 아래에서 불가리아와 유고, 그리고 東獨의 实例를 中心으로 보다 많은 利潤獲得을 위해 東歐圈의 企業經營 實態가 어떻게 改革되었나를 살펴 본다.

첫째 불가리아의 경우, 발칸의 <小蘇聯>이라고 불리우리 만큼 政治的 自由화가 全無인 곳인데도 그 經濟政策을 보면 利潤의 增大를 위해서는 政治秩序에 紊亂이 오지 않는限, 經營實態를 改編해 보자는 試圖가 있었다. 즉 1964年 불가리아政府는 黨 中央委員인 同時에 經濟學者인 Kunin 교수의 <經營改編論>을 받아들여

註20) 韓半島의 統一基盤造成으로써의 集中理論의 適用可能性与否를 參照要覽 (1972年 11月의 国土統一院 研究用役).

이를 實施해 본바 있었다. 구닌教授 이론의 要旨은 아래와 같다.
 가) 勞働者가 製品의 品質이나 利潤에 興味를 갖도록 個人에게
 物質的 자극을 주라는 것. 나) 利潤을 내지 못하는 企業에 대해
 서는 國家補助를 中斷하고, 그리고, 各 企業에 對해 經濟的인 獨立
 性을 부여 하라는 것. 다) 各 企業에 對한 中央委의 指令을 最小
 限으로 줄이고 個個企業이 이니시아티브를 갖고 企業間에 競爭을
 할수 있도록 권장하라는 것 등 이었다. 21) 소피아 近郊의 纖維工場
 하나를 모델로 選定하여 구닌教授의 經營論을 施行해본 結果, 그
 成果는 매우 좋았다. 年間 計劃이 11個月內에 이미 完遂되었는
 가 하면 製品의 質도 오히려 더 좋아졌고 또 從業員의 給料도
 平均 10%가 引上되었었다. 勿論 구닌理論을 合法化한 經營改竊
 施行令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았지만 불가리아는 그後 줄곧 위의
 實驗施行을 시범삼아 經濟 自由化에로의 새로운 指針을 研究中에
 있다.

둘째 유고의 경우인데 “收斂理論의 理論과 實際”라는 모델은
 아마 유고에서 찾을수 있지않나 할 程度로 이 나라의 所謂
 “競爭社會主義”도 興味있다. 유고의 獨自的인 社會主義는 <勞
 働者 自主管理>라는 制度를 마련하고 最大限의 利潤을 企業經營에
 서 노리고도 있다. 同制度는 最近 共產圈에서 利潤方式 채용의
 모델이 되기도 했는데 第二章의 유고欄에서 이를 詳述했기 때문에

註 21) 불가리아 共產黨 理論誌 Novo vreme. 12/63, PP. 34-43

此項에서의 說明은 略한다 22)

세제는 東独의 新經濟政策이다. 50年대의 東独經濟는 技術改革의 不振과 蘇聯型의 中央管理 經營方法때문에 計劃經濟案 施行에 매번 失敗했었다. 그래서 63年以來 소위 新經濟政策을 適用 施行해 오고 있는데, 이 新經濟政策이란 中央当局이 全担해온 經濟計劃과 經營管理를 <企業聯合體>에 移讓한 制度다. 즉 從來에는 中央当局이 좌장했던 大幅的인 權限을 이젠 소위 <人民企業聯合>이 장악하고서 그 計劃과 經營全般에 參與하고 또 그를 管理하는 것이다. 1970年 現在 東独에는 業種別로 都合 110個의 人民企業聯合이 있었다. 그런데 이 聯合體가 從來에 <國家經濟評議會>와 <國家計劃委員會>가 장악했던 決定權을 이양받고 經營實務를 遂行해 가되, 中央当局은 諸指令을 最小限으로 줄이고 있는 것이다.

이 新經濟政策에는 또한 價格制度의 改革, 資產 再評價制, 利子 및 利潤의 導入方法 등등 많은 改革措置도 包含되어 있다. 이 新經濟政策은 달리 말하면 東独의 經濟的 自由化인데, 政治的 自由化와는 別個의 것인 이 新政策이 施行되지 않았던들 세계 8位에 이른 東独의 經濟發展은 있을수 없는 것이다.

東歐 三國의 事例에서 본바와 같이 저들의 企業經營이 合理的인 運營에로 그 體制를 改革하면서 보다 많은 利潤을 쫓아 變해가고

註 22) Kreis, K.M.: Primat der Deutschlandpolitik,
In: politik und Zeigeschichte, Heft B19/73, S. 6f

있다는 것은 收斂理論의 假說이 前提된 變化는 아니든간에 産業社會에 로의 發展途上에서 나타난 經濟面의 特色인것 만은 틀림 없다.

그렇다면 위와같은 東西체제의 收斂化는 오직 經濟面에만 限定되는 것이냐는 의문이 생긴다. 收斂理論家들의 持論에 依하면 如上한 收斂化現狀은 必是 社會全般에 일고 만다는 것이다. 베르린大學의 H. 하이만 (Heimann)에 의하면 産業社會의 收斂現狀은 社會全般에 일기 마련이기에 이질체제가 포지티브한 方向으로 內的 改革을 이룩해 가면 필경 外政治 對立도 避할수 있다는 것이다.²³⁾

즉 兩獨의 內的變換과 이질적 社會체제의 收斂化的 發展이 遂行되기만 한다면 東西의 兩獨體제가 존속하는 속에서도 獨逸은 平和的인 方法으로 分斷을 초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換言하면 東西獨社會제도의 收斂化的 發展은 필시 社會主義와 資本主義間의 Synthese 型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東西獨이 이같은 體制面의

Synthese 型을 낳을 경우 東西列強은 兩獨의 존속下에서도 彼에 對해서는 새로운 統一獨逸 형태를 許容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왜냐하면 獨逸의 어느 한쪽이 體制의 優位를 競爭的으로 誇示하지 않고 다른 한쪽에 존속되어 있는 社會秩序를 破壞하는 「一要因」이 되지 않을때 兩獨體는 모두 獨逸의 再結合을 구태여 방해할 必要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東西列強의 承諾下에 成立될 수 있는 새 統一獨逸은 資本主義 經濟體制의 基底위에 서서도 안되며 東歐의 一黨獨裁적인 政治體制 바탕위에 서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결국 하이만理論의 유토피아의 核心은 東西政治의 橋梁役을 맡는 새 獨逸國家의 概念인 것이다. 즉 外政治的으로는 東西方

의 橋梁役을 하되, 政治, 經濟, 社會秩序 등을 포괄하는 內政은 民主的이고 自由·법치주의적인 同時에 社會主義적인 兩體制의 綜合型的 Status 라야 한다는 것이다.²³⁾

하이만의 논거는 결국 構造的 類似性이 諸國家間的 平和적인 우호關係를 樹立하는 前提라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內政面의 收斂化는 外政的 對立을 해소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分단민족의 再結合을 可能케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가 諸國家間的 우호關係를 內的 構造的 類似度에 따라 맺어지는 것이라고 본것은 一般論으로써는 非論理的인 命題는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獨逸의 경우와도 꼭 合致되는 大前提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은 필자는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히틀러 獨逸의 罪過와 獨逸人의 優等生的 能力 및 기질 때문에 獨逸의 이웃들은 아직까지도 獨逸人의 恠害적인 東進을 은근히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만의 理論과 그 設計대로 통일된 세 獨逸이 兩鬚력을 떠나 政治적 中立을 지키며 存立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複雜한 問題들이 惹起될 可能性이 아주 많은 것이다. 例컨데 <새 獨逸>이 美國의 對 유럽 政策에 影響받아 은연중에 西方으로 기운다고 할때 獨逸關係는 惡化되어 東西對立의 再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새 獨逸>이 적어도 그 建立初期에 西方的인 制度의 特色을 보일때 社會주의적 特色이 衰殘해 간다 해서 巴黎條約國家들이 反旗를 들것도 틀림없는 事實이다.

註 23) Heimann, H.: 前掲書, P.29

또 통일된 새 독일이 共產體制를 가졌다고 할 경우, 이 國家의 經濟力과 精神力은 共產主義의 獨逸的 모형을 낳아 中·蘇紛爭 못지않은 이념분규를 가져올수도 있기에 蘇聯은 獨逸의 共產化도 바라지 않을 것이며 폴란드도 이를 반대할 것이다. 이러한 一連의 理由를 綜合해 보면 새 形態의 統一獨逸이 蘇聯에게 아무리 그 <필랜드化>를 약속한다 해도 蘇聯은 이를 不信하고 경원하기 때문에 애당초 <새 獨逸>의 탄생자체를 不願할 것이 틀림 없는 것이다.

유럽에서 占하는 獨逸의 位置가 위와 같고 보면 東西獨逸 體制的 收斂化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卽時體制가 존속하는 限 어느형태의 통독도 불가능한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이 된다. 결국 독일問題만은 內的 收斂化를 통한 外政的 對立의 해소라는 범주에서도 例外가 될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이만理論은 그 一般論的 해석에서 보면 分斷國家의 歷史的 배경과 그 国力이 독일같지 않는 限 分斷초극의 槓桿이 되는 理論이기도 하다.

우리의 南北關係처럼 體制的 異質性이 너무 크고 또 雙方의 偏狹한 國策이 平和的 對話의 길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이만理論에 立脚한 內政改革的인 收斂化 作業이 南北對話를 成功的으로 이끄는 原則이 될수도 있다.

筆者는 위의 第三章에서 對東歐 接近을 위한 內外政의 改革的 어프로치를 해 보았다. 이를 다시 한번 要約해 보면 첫째 7.4

聲明을 통해서 北韓을 默示的으로 承認하고서도 外政에 있어서는 繼續 单独代表權을 내세우는 우리의 態度는 보순이니 이는 시정되어야 할 點이다.

둘째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不遠한 將來에 好機를 포착하여 <一民族=國家論>에 依拠, 北韓을 國法的으로 承認하고 北方政策의 指針과 基本方向을 内外에 公表하여야 한다.

세째 우리의 維新作業은 長期計劃下에 異質的인 體制構造를 平衡하는 方向으로 遲滯없이 遂行되어야 한다.

네째 <一民族=國家論>을 우리 스스로가 是認하는 前提下에 對 東歐 接近을 戒하되, 좀더 積極한 對外弘報活動으로 歪曲된 韓國觀을 改善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의 外交는 单独代表權의 固守를 위한 “支持票 獲得作業”을 止揚하고 實利追求로 전환하되, 東歐圈의 接近을 위해서는 “第三國과 東歐各國과의 유대를 十分 利用하여²⁴⁾ 모든 在外公館이 對東歐接近에 集中的인 活動을 전개해야 한다.

여섯째 北方政策의 指針을 밝히기 以前인 現 默示的 承認段階에서도 第三國을 仲介로하는 對東歐 經濟·文化交流의 실마리는 早速히 찾아져야 하고 幅넓은 東歐研究가 積極 권장되어야 한다.

註24) 第三國과 東歐各國의 유대관계는 歷史的인 側面에서 규명하여 그 親近性을 窺아 우리의 接近試圖에 利用되어야 한다. 例컨대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및 폴란드에의 接近에는 프랑스가 仲介役을 해야하고 체코에는 英國, 유고에는 오스트리아와 西獨이 各各 우리의 仲介國이 되어야 할것같다.

對東歐 接觸上의 仔細한 تاک틱問題는 外務部의 實務者가 말아야
하며 筆者는 다만 對東歐外交를 위한 基本的인 問題에 關하여 如
上의 6個項 These를 낸것으로써 이 글을 맺는다.